

한국경제의 7대 과제 설명

구분	과제	설명
1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p>고령화와 국내 투자 부진 속에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행의 예측에 의하면 내년에는 2%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는 노동과 자본 투입 보다는 기술혁신과 비효율 제거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에 바탕을 둔 신사업은 빠른 혁신과 많은 무형자산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각국은 신산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극복의 중요한 해결 방안이다. 한국경제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p> <p>바이든 미 대통령은 과학기술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세계기술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집중하여 과학기술 패권을 꿈꾸는 ‘과학기술 중국몽’을 추진 중. 세계 주요국들의 과학기술 패권전쟁과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경쟁은 국가의 명운을 건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을 확보해서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전략이자 생존전략.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중요함.</p> <p>이를 위해 <G5 경제강국 전략> 이른바 ‘555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함. △5개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 5개 육성 △G5 경제강국으로 진입전략임.</p> <p>이를 위해 첫 번째로 정부조직을 과학기술 중심국가에 맞게 혁신적으로 재편하겠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하여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 총괄2.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고, 과학기술계 추천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정부와 과학기술계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 국가 미래전략을 논의하겠음3. ‘국가미래전략위원회’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여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4.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수석비서관급으로 조정하겠음 <p>둘째, 혁신적인 과학기술체계 구축과 기업지원에 나서겠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세계 기술패권 전쟁과 글로벌 혁신 거버넌스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음2.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인당 GDP 5%까지 확대3. 연구개발비 예산 배분·관리 정부가 아닌 과학기술계+기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 위임4. 기초과학·원천기술 과제 중복허용하고, 역동적이고 중장기적인 과학기술예산 결정구조 만들겠음5.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육성하기 위해 2조 원의 ‘초격차 펀드’ 조성, 유망 벤처기업의 ‘법인세 면제’, 기업의 투자규모 최대 50% ‘세금감면’ <p>셋째, 국가전략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하겠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인재 50만 명을 추가로 양성하겠음2.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3. 산업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AI,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을 신설하여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4. 5대 초격차 분야, AI,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5.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연구 및 기술인력 이민제도 도입 <p>넷째, 과감한 규제혁신</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적 규제개혁2. ‘규제혁신법’ 제정하여 ‘규제혁신처’ 신설, 각 부처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음

2	저출산 문제	<p>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18~2020년 사이 0.98명, 0.92명, 0.84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를 유지시키는 수준인 2명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1984년이나, 그 동안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국제순유입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2021년 12월 9일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가장 기준이 되는 중위 추계를 따르더라도 인구가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 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대 초반에 4천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위 추계를 따르면 2030년대 초반에 4천만 명대가 될 것이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이 지속되면 가임 여성 수 자체가 감소하여 인구 감소를 가속하게 된다. 인구는 소비 측면에서 내수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일 뿐만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는 가용한 노동력의 규모를 결정한다. 물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재화나 서비스 생산 등 모든 면에서 노동 절약적·대체적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실업'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상이 인구 및 전체 경제 규모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복의 기미가 없는 출산율의 하락은 한국경제에 잠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p>
---	--------	---

저출생 심화 문제는 출산수당을 더 주거나 보육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 취업-주거-보육-경단녀 예방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저출생 근본 원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철수 후보는 'G5 경제강국' 전략을 발표하며 청년이 원하는 질 좋은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과학기술중심국가전략으로 △5대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G5 경제강국 클럽 진입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555 공약'임.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 5개가 만들어지면 협력업체, 산학연구소까지 대규모 일자리가 생겨날 것임.

두 번째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동안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 이중 절반인 50만 호를 청년에게 우선공급하겠음(분양 40%, 임대 60%)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로 공급해서 저층부에는 창업공간, 지역주민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등을 조성하겠음.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함. LTV 80%까지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로 15년 거치 30년 상환 하도록 하겠음.

'출산~보육 국가책임제'로 '경단녀'를 예방하겠음.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음. 방과후 저녁 7~8시까지 취미, 휴식, 코딩교육, 논술 토론,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부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음.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임기 내 공공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하고, 출산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시군구 기초자치별로 설립하겠음.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높은 '인구 데드크로스'는 시작됐으며, 전문가들은 10년 후 인구절벽을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가구 수는 더디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함. 특히 60세 이상 노년 인구 비중이 10%에서 20%까지 도달하는데 유럽국가들이 80~100년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년 걸리면서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가 적응할 시간이 부족, 사회적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향후 10년 동안 인구변화에 대한 완화·적응·기획의 세 가지 전략수립 반드시 필요함 △(완화) 출산율 제고, 이주민 정책 등으로 빠른 인구감소 속도 완화 △(적응) 작아지는 수에 대한 사회적 적응 △(기획) 미래를 보며 기획하여 도약의 기회로 전환. 특히 사회의 전 분야 경제·사회·복지·교육·부동산·산업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인구감소를 고려한 사회적 논의 필요함

3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p>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대규모 양적완화로부터 촉발되고, COVID-19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급격한 재정정책으로 더욱 심해진 유동자금 증가 및 금리 하락이다. 두번째 요인은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실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거래세 인상, 재건축 억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대출 규제 등 반복적인 수요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시도하였지만,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막기는 어려웠다. 도리어 수요억제 정책은 역진적 자산배분 효과를 유발하여 형평성마저 훼손하였다. 2021년 11월의 주택가격은 5년 전인 2016년 11월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46.0% (KB 매매가격지수, 전국 종합), 서울 아파트만 보면 61.2% (KB 매매가격지수, 서울 아파트) 상승하였다. 이제 평균적인 근로자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세대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시장의 수급을 정상화시켜 가격이 서서히 내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폭등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이다. 만일 일본의 90년대 부동산 가격 폭락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p>
<p>국가는 맞춤형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사회는 보유한 금융자본을 서민과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참사는 이러한 서민의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공급자, 수요자를 토건족, 투기꾼으로 몰아가더니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공급차단 정책은 시장 불안을 부추기며 집값 폭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임대차 보호 3법이라는 비현실적 법안을 만들어 전세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p> <p>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포함한 충분한 공급대책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국가 책임 있게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5년간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100만호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가격의 연착륙을 이뤄내겠습니다.</p> <p>그리고 초장기 기준금리적용 주택 담보대출을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목돈마련 가능성을 높여주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주거비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p>		
4	잠재성장률 제고	<p>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수치'로 정의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잠재성장률 추계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실제 경제성장률 추이가 꾸준히 낮아져 온 현실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한때 10%를 넘었던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1980년엔 8%대로 낮아졌고, 2000년대와 2010년대는 각각 4%대 후반과 3%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로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투자부진으로 인한 자본축적의 저하가 지적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가 곧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이 필요하다.</p>
<p>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造船) 산업 등을 일으켜서 우리가 80,90년대 20년 동안 먹고 살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벤처붐을 일으켜 이후 20년을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역할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먹고살 거리를 새로 찾는 것입니다.</p> <p>저는 과학기술중심국가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G5 경제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5-5-5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현 단계 우리가 강점을 갖고 5개 분야에서 세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어 G5 국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 등 5개 이상의 초격차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AI, 반도체 등도 별도의 지원육성 전략을 통해 세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p> <p>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국가역량을 총집중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신성장산업을 혼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할 것입니다.</p>		

5	가계부채 문제	<p>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 채무상환 능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도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11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세계 37개 주요국 (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이 1년 사이에 6%p 올라, 증가속도도 가장 빨랐다. 가계의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170%를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서 금융안정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
<p>가계부채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계부채 수준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이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p> <p>다만, 관리는 필요하나 전세대출이나 실수요자 주택 구입 비용에 대한 과도한 대출규제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목적의 대출을 억제해야 하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너무 옥죄면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p>		
6	소득불평등 문제	<p>소득불평등은 경제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구 단위로 얼마나 불균등하게 배분되는가를 측정한 것으로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적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결속력을 낮추어 정치적 사회적 위험도 야기할 수 있다. 가구간 소득불평등은 시장에서 벌어들인 시장소득(세전소득) 기준 지수와 시장소득에 조세와 보조금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 기준 지수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후자는 실제 가구가 체험하는 소득불평등에 가깝고 일반적으로 국제비교에도 이 지표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소득불평등 지수 모두 외환위기 이후 2009년까지 크게 상승했으나, 그 이후에는 두 지수가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 불평등지수'는 2010년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5년 이후 다시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다. 시장소득지수의 변화는 임금격차의 확대, 여성이 노동에 참여한 비율의 증가, 고령화의 심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처분가능소득 불평등 지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강화된 소득재분배 제도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국제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2018년 기준 OECD 36개 국가 중 7위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구사회주의 동구권 국가들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2010년 이후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저성장 기조와 함께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하여 국민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므로, 사회불안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p>
<p>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파악됨.</p> <p>(시장) 먼저 임금격차의 확대를 야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 대기업-정규직으로 대변되는 1차 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2차 시장의 문제가 그러함.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별격차와 기업규모별 격차가 뚜렷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정규직 보다 보수가 밀리지 않지만,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 비율은 높고,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유리천장과 경단녀 문제가 핵심으로 승진의 곤란은 호봉제 하에서 임금상승의 여력을 차단하고, 경단녀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기대하기 곤란</p> <p>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고용유지 조건부 적극적 우대정책으로 임금상승 여력 확보 ▲ 호봉제→직무급으로 임금체계의 개편유도 ▲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시장 이동지원 ▲ 일·가정 양립 및 보육강화 정책 실시</p> <p>(복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거의 모든 소득보장제도는 이러한 재분배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포퓰리즘으로 인한 퍼주기로 재원부족 및 선택과 집중 부재에서 기인하는 높은 수급요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급여수준이 문제임.</p>		

무엇보다도 ▲ 포퓰리즘 정책추진 근절 ▲ 유사사업 통폐합 등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 육아휴직, 실업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 소득대체율 확보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 40%로 기준상향 등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등의 정책 실시

(기회) 최근의 연구동향을 보면,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심화한 1990~2000년대에는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격차가 소득 불평등을 주도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근로소득보다는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료, 영업이익 등 비근로소득 격차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러나 ▲ 비근로소득 격차는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청년계층은 부동산 시장 진입에서 기회가 박탈되고, 주식이나 코인 등은 공매도 재개 문제나 주식양도소득세 신설 부과 등으로 활동이 제약되기 때문에 재검토 필요

7	국가부채 문제	<p>국가채무/GDP 비율은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이다. 202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064.4조원으로 GDP의 50.0%에 이른다. 다른 나라와의 상대 평가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인데, 2019년에 우리나라는 42.1%이고 OECD 평균은 109.5%다. 이 수치로만 보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OECD 평균은 가중평균이라, 비교를 위하여 단순 산술평균으로 환산하면 81.9%로 크게 낮아진다. 게다가, 우리는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 규모가 내부거래로 부채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GDP의 약 8% 수준으로 추산된다. 결국 2019년 국가부채 비율의 우리나라와 OECD 비교는 '42 대 110'이 아니라, '50 대 82'가 된다. 2025년 D1 비율 전망치는 2017년보다 22.8%p 늘어난 58.8%인데, 이를 D2로 환산하고(+4.5%p) 국민연금 요인을 더하면(+8%p) 71.3%에 달한다. 최근 이처럼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거시경제 안정의 근간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고령화와 통일 등에 대비하고, 외부충격의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재정건전성은 국가신용도 평가의 중요 요인이다. 재정지출 혜택의 1차 수혜자는 현세대이므로, 혜택·부담의 세대간 공평성 면에서도 과도한 재정적자는 피해야 한다. 국가부채의 급격한 누증과 그 부작용(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 국가신용도 하락, 자본유출 등)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저출산·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는 '지속적인 재정기능의 작동'이 가능하다.</p>
---	---------	---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상 부채는 총 1,985.3조로서 이중 ·공무원·군인 등 연금충당부채는 1,044.7조로 총부채액 대비 52.6%를 차지하고 있음. 물론 이는 향후 70년간 예상되는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군인연금은 1977년부터, 공무원 연금은 2001년부터 이미 재정고갈로 지난 10년간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29조 원 이상, 지난 48년간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28조 원 이상이 투입되었음. 또 직역연금 전체의 적자액은 20년 한해만 5조 6천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11조 2,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연금개혁으로 조세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함

이에, ▲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를 추진하여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직역연금을 일원화하여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할 것임